

KDF

민주주의 리포트

Issue & Review on Democracy

2022년 4월

제기호

안정적 평화와 민주주의

: 다른 평화들의 소통과 경합

허지영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발행일 2022년 4월 2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문의처 edit@kdemo.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안정적 평화와 민주주의

: 다른 평화들의 소통과 경합¹⁾

허 지 영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평화, 갈등전환, 국제분쟁 이론과 사례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적대관계와 민족관계라는 상호모순성이 존재하는 남북한 관계로 인해 개별정치체로서 남북한의 공존을 강조하는 주장은 때로 통일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이렇게 경우에 따라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통일과 평화 담론은 남한 사회의 주요 갈등 요인이 되어왔다. 국가 간 전쟁의 가능성이 소멸된 평화적 관계를 뜻하는 '안정적 평화' 개념은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과 다양한 형태의 통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평화와 통일 정책의 긴장성을 완화하는 정책목표가 될 수 있다. 또한, 분단의 감정과 정동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타자를 적대시하고 혐오와 배제의 감정을 표출하는 반면 우리 편은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우리 사회의 갈등 현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타자에 대한 적대성을 경합성으로 전환하며 설사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상대일지라도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정당성을 지닌 정치적인 타자로 인식하고 그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행동을 판단하는 개방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합적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 고질화된 갈등과 혐오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 개념으로서 의미가 있다.

1 평화와 통일,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다

한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말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없을 만큼 통일은 당연한 민족의 목표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길어진 분단과 2018-19년 평창올림픽과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연이은 개최로 평화가 곧 도래할 것 같던 분위기가 급랭하고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서 평화와 통일 논의 자체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은 높아지며 통일의 당위성에 동의하지 않거나 현 2국가 체제를 지지하는 국민이 증가하는 추세이다(김범수 2021). 특히 이러한 변화는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진다(이상언 2021). 게다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오히려 심각한 갈등을 양산하며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정성운 외 2020).

1) 이 원고는 필자가 작성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담론에 대한 대안적 논의: 안정적 평화," 『평화학연구』 제23권 1호(2022)를 바탕으로 전면 재작성하였다.

통일·평화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주로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나타났지만, 진보진영 내에도 통일이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한 예로 백낙청과 최장집 사이에 벌어진 한반도 평화체제의 미래에 관한 논쟁을 살펴보면, 2018년 최장집은 “(탈냉전이라는) 신질서 하에서 이해되는 평화공존은 통일의 가능성을 시야에서 제거해버리는 남북한 관계”라고 언급한다(최장집 2018). 이질적인 정치·경제체제가 이미 굳어졌고 사회구성원들이 이를 완전히 수용한 남북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평화는 통일이 아닌 상이한 체제 사이의 공존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일이 외교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천관율 2018). 그는 또한 한반도에서 탈냉전과 남북한의 공존을 “통일에 이르는 과정이고, 단계”로서 인식하는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밝히며 통일을 지향하는 법 조항들과 현실은 이미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헌법은 사실상 효력이 정지한 상태라고 설명한다. 이에 백낙청은 최장집이 주장하는 ‘분단지향적 평화공존론’ 또는 ‘양국체제론’은 기존체제를 유지하려는 논리로 분단 상태에서의 평화체제는 “전쟁 위협에 시달리고 분단체제 아래 신음해 온 민중들에게 다시 ‘가만히 있으라’고 달래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난한다(박인규·이재호 2018). 두 학자 사이의 논쟁은 본질적으로 ‘담론을 펼치는 ‘단위’가 다르다(이병천 2006). 백낙청은 체제 작동과 우리 주체성을 구성하는 단위를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논의하지만, 최장집은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이 극복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국가 단위에서 평화를 논의한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우리 (self)’의 범주를 대한민국 국가 단위에서 인식할 것인가, 북한을 포함하는 한민족 전체로 볼 것인가에 차이가 있다. 민족 단위로 사고하는 백낙청의 통일론은 한반도에 남북한 모든 주민이 분단체제에서 벗어나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세계체제의 억압성이 약화된 통일을 지향한다. 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 단위에서 논의를 발전시키는 최장집에게는 이미 개별국가로서 정체성이 뚜렷해진 남북한 개별국가를 통합하는 것보다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정치체로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우선한다.

적대관계(평화)와 민족관계(통일)라는 상호모순적인 차원이 공존하는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이중성에서 비롯된 이런 차이는 남남갈등의 동인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연결된 문제로 북한의 핵 개발이 사실상 완성단계에 도달했고 미·중 패권경쟁이 격돌하는 한반도의 현 상황에서 합의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본 글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심각한 남남갈등은 외면한 채 남북관계에만 몰두해 온 방식이 지금까지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과 개별국가로서 남북한의 평화적인 공존을 강조하는 것이 곧 통일이라는 목표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이분법적인 평화와 통일 인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먼저 평화와 통일의 긴장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 개념으로서 안정적 평화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온 ‘통일’이나 ‘민족’과 같은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이나 더 나아가 통일이라는 목표를 제거할 때 오히려 한반도에 평화구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통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적 미래를 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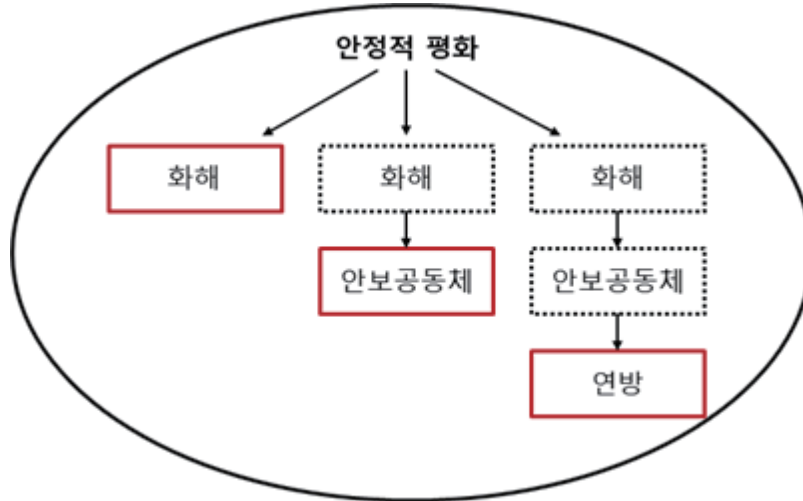
경합주의(agonism)를 통해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분단의 감정과 정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타자를 적대시하고 혐오와 배제의 감정을 표출하는 반면 우리 편은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하는 현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남남갈등의 문제는 남북한 관계와 깊이 연결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완화할 필요가 있다.

2 안정적 평화, 평화·통일 정책의 ‘최소’ 목표

안정적 평화 개념을 처음 제시한 볼딩(Boulding 1978)은 안정적 평화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아 관련국들이 전쟁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 불안정한 평화는 전쟁 발발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평화가 규범으로 여겨지며 전쟁은 평화의 규범이 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로 정의했다. 국가 간 오래 지속되는 평화의 상태이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이나 무력을 배제하는 인지적 현실을 의미하는 안정적 평화는 타 평화논의보다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개념으로 안정적 평화의 형성은 평화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갈등당사국들의 의도적인 결정에 달려있다. 안정적 평화 개념은 쿵찬(Kupchan 2010)이 지역적 차원에서 다자간 안정적 평화지대(zones of stable peace)의 형성을 논의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부재했으나 남북한이 계속 대립하는 상황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안정적 평화가 소개되면서 주로 양자관계 중심으로 논의되지만, 안정적 평화는 “전쟁 가능성이 소멸된 국제적인 공동체” 즉, 지역적 차원에서 다자간 평화지대 형성에 보다 관심이 있다. 다만 본 글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평화와 통일 담론의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적 개념으로 안정적 평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안정적 평화 이론이 남한 내부 담론에 시사하는 바에 초점을 두고 논의한다.

쿵찬에 따르면 안정적 평화는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공존이 가능해지는 ‘화해’ 단계로부터 ‘안보공동체’와 ‘연방’으로 순차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이상적이다(Kupchan 2010). 하지만, 모든 사례에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므로 <그림 1>과 같이 화해, 안보공동체, 연방은 안정적 평화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갈등당사국들이 별개의 정치체로서 공존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화해 단계에 머물 수도 있지만, 통합이 깊어지고 사회적인 합의가 형성될 수 있다면 안보공동체나 연방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따라서 안정적 평화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평화적 공존과 통합·통일은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안정적 평화는 평화와 통일을 둘러싼 대립과 충돌을 최소화하는 대안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림 1〉 안정적 평화 유형



※ 출처: Kupchan 2010, 37 참조로 저자 수정

안정적 평화의 관점에서 통일 즉, '단일한 정치체'가 구성되려면 장기적인 갈등과 적대관계를 경험한 남북한은 먼저 개별국가로서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화해' 단계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적대성이 사라지고 전쟁 가능성이 소멸되는 인지적 전환 과정이 생략된 채 단일국가로의 평화적인 통합은 거의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안정적 평화는 통일국가 건설이 최종적 목표가 아니며 개별국가로서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화해에 머물러도 된다. 상호적대성이 해체되고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사라진 관계를 형성하는데 초점이 있는 안정적 평화의 관점에서 단일국가 형성은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전히 상호적대적 정체성에 변화가 발생하지 못하고 전쟁 가능성도 제거되지 못한 불안정한 평화의 한반도 상황에서 통일의 필요성이나 통합정부의 형태에 대한 논의가 소모적인 갈등으로 이어진 현실을 생각할 때 안정적 평화 이론이 제시하듯이 남북한 관계에 상호 인지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개별국가로서 평화로운 공존에 합의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불안정한 평화가 안정적 평화로 전환된 이후 교류협력이 여러 영역으로 확산되고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국민적 합의에 따라 통합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안정적 평화는 개별국가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화해 단계 이후는 열린 결말이며 불안정한 평화상태에서 통일의 당위성이나 통일 정부의 형태는 합의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물론 평화통일 정책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적 미래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김연철 2011). 하지만, 불안정한 평화상태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미래상을 두고 발생하는 갈등이 오히려 평화프로세스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지속성을 훼손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면 논의의 초점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전히 불안정한 평화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상황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통일이어야 하는지 분단지향형 평화체제 구축이 되어야 할지는 합의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안정적 평화는 평화·통일 정책 목표를 둘러싼 논의에 치중하기보다는 먼저 불안정한 평화로부터 안정적 평화로의 전환을 위한 인지적 변화 방안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3 다른 평화들의 소통과 경합: 옳고 그름이 아닌 선택의 문제로

더 이상 민족이나 통일과 같은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논의해야 하는 것일까? 통일의 당위성에 동의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통일이라는 목표를 제거해야만 한반도의 평화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이 그러하듯이 통일이나 민족과 같은 가치들도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닌 선택의 영역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국민의식을 고려할 때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통일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다양한 평화와 통일의 상이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경합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분단체제는 남북한 주민에게 분단의 감정과 정동을 남겼다(김성경 2020). 평화갈등학의 고질갈등(intractable conflict) 이론²⁾의 관점에서 보면 남북한 간의 오랜 고질갈등은 개인과 집단의 심리, 정체성, 감정 그리고 사회의 에토스(ethos)의 형성에 영향을 주며 이는 갈등내러티브와 갈등문화로 재현되고 교육이나 언론과 같은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제도화한다.³⁾ 또한 오랜 고질갈등으로 인해 남북한 간에는 제로섬 경쟁(zero-sum contest)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 관계에서는 상대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집단의 존재나 정체성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우리 집단의 정체성은 상대를 부정하고 존재를 말살해야 한다는 적대성을 바탕으로 한다. 혐오와 적대 감정과 결합된 이분법적 정체성은 강력한 갈등문화를 형성하게 된다(Bar-Tal 2013). 고질갈등 상황에서 생성·발전되어 본질적으로 '선한 우리' 대 '악한 타자'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집단정체성은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신념화하여 변화시키기

2) 고질갈등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현대갈등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개념으로 폭력적 갈등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래 지속되어 다루기 어려운 갈등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해당하며 한반도 갈등도 이에 해당한다. 고질갈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허지영, "고질갈등 이론으로 보는 남북관계" 서보혁·문인철(편) 12개 렌즈로 보는 남북관계 (서울: 박영사, 2021) 참조.

3) 고질갈등은 사회의 지배적인 특징을 결정하는 주된 사회적 신념, 즉 에토스(ethos)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질갈등으로 인한 사회심리학적(socio-psychological) 영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aniel Bar-Tal, Intractable Conflicts: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and Dynamic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참조.

어렵다(Chhabra 2016).

이처럼 남북한 고질갈등은 남북한 사회의 구조와 문화 그리고 국민의 심리와 정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북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각 사회에 고착된 갈등문화와 갈등내러티브의 해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구성원들의 이분법적 세계관, 적대적 정체성과 감정의 완화는 상대의 존재를 말살하는 것이 곧 우리의 생존이라는 제로섬 남북한 관계의 변화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남북한 고질갈등에서 비롯된 갈등문화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혐오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갈등이 오래 지속되면서 북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에 동의하지 않는 상대를 적대적 타자로 인식하고 무조건적인 혐오와 분노를 표출하는 현상으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남북한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남남갈등 현상으로 나타나는 남한의 갈등문화 해체와 불가분의 관계다. 남남갈등을 외면한 채 남북관계에만 몰두하는 것이 오히려 한반도 평화구축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평화프로세스 자체를 경합적 과정으로 인식하는 경합주의(agonism)는 남북한 갈등전환에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남갈등을 완화하는 과정에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강혁민 2022). 경합주의는 속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접근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속의민주주의는 공론과 속의의 과정을 거쳐서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속의를 통한 합의 과정에서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갈등이나 충돌, 적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Mouffe 1993). 합리적 이성애 근거한 공론을 통한 합의 도출을 강조하는 하버마스(Habermas)의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합주의는 이런 전제 자체에 의문을 던진다. 특히 무페(Mouffe)는 정치에는 친구와 적을 구분하는 즉,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배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배제와 포섭’의 절차가 반드시 포함된다는 슈미트(Schmitt)의 인식을 새롭게 수용하여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우리’와 ‘그들’ 사이의 경계는 확정적인 것도 아니며 최종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갈등의 과정에서 집단정체성의 경계는 얼마든지 열려있으며(Mouffe 2000), 대립하는 의견들이 서로 마주할 수 있는 경합적 논쟁의 장을 마련하고 그런 논쟁의 장들이 제도화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다. 무페에게 민주주의 핵심은 적대적인(antagonistic) 정체성과 감정을 다원주의적이며 상호공존이 가능한 경합적인(agonistic) 것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Mouffe 2005). 고질갈등 상황에서 형성된 집단정체성은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 놓여있는 상대를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나의 생존에 위협한 ‘적’으로서 인식하지만 경합주의는 상대를 정당하고 적법한 상대(adversary)로 인식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경합적 상대로서의 타자는 생존을 위해 소멸시키거나 파괴해야 할 ‘슈미트적인 적’이 아니라 정치라는 대결의 장에 합법적이고 정당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체이다(Mouffe 2005).

서로 다른 관점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불일치점과 그것을 바탕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과 대립을 속의를 통해 소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속의론적 인식을 비판하는 경합적 민주주의는 차이를 수용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아렌트(Arendt)는 상이한 차이를 서로 대면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주체들 간의 ‘합의’보다는 ‘화해’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유용민 2013).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의 구분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하는 속의는 지향하는 가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해결이 매우 어렵다. 경합주의는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타자에 대한 적대성을 경합성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며 상대가 설사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정당성을 지닌 정치적인 타자로 인식하고 그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개방성(openness)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이다.

경합주의의 관점에서 남북한의 적대성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남북 행위자들이 정치적 차원에서 불일치를 상호 인정함을 통해 남북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를 정당한 행위자로 받아들여야 한다(강혁민 2020) 뿐만 아니라 평화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남한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관계 또한 경합적으로 전환되어 서로 다른 평화의 개념이나 통일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건전하게(constructive) 경합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제도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을 선악이라는 도덕적 잣대로 판단하고 배제하는 이분법적 세계관과 갈등문화가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의견들 사이의 갈등과 경합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필요한 최소의 것부터 합의하고 이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일과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 대한 시각은 남북한이 다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하다. 더구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젊은 세대가 점차 과거 모두가 동의했던 ‘민족’이나 ‘통일’의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모든 부문에서 합의된 통일은 상상에 가깝다. 정치적 상대를 적대적 타자로 인식하고 그들의 주장을 도덕적 잣대로 판단하는 속의적 모델은 남남갈등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 상대를 적법한 타자로 인정하고 상호 통일과 평화의 상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최소의 합의점을 논의하기 위한 민주적인 소통과 경합의 장이 우리 사회에 먼저 마련되어야 하며, 그러한 경합의 과정을 통해 선택된 결과라면 자신의 가치나 신념과 다를지라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경합적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 고질화한 갈등과 혐오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적 개념으로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혁민. 2022. “경합적 평화론의 한반도 평화구축에의 함의: 경합적 다원주의를 중심으로.” 『담론201』25(1), 79-111.
- 김범수. 2021. “통일과 평화, 시대와 세대 앞에 서다, 2021 통일외교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김성경. 2020. 갈라진 마음들. 서울: 창비.
- 김연철. 2011.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상관성: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결과로서의 통일’의 관계.” 『북한연구학회보』15(1), 111-130.
- 박인규·이재호. “백낙청-최장집 한반도 평화체제 논쟁: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양립 가능한가?” 프레시안 2018/7/16.
- 유용민. 2013.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의 비판적 수용: 속의적 접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21(4), 5-45.
- 이병천. 2006. “다시 우리 시대 진보를 말한다.” 『황해문화』 52, 428-439.
- 이상연. 2021. “통일이 필요하냐는 20대, 설득 가능하십니까?” 중앙일보 2021/9/15
- 정성윤 외. 2020. “한반도 비핵·평화 추진환경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Online Series CO 20-10. 서울: 통일연구원.
- 최장집. “한반도의 냉전해체와 평화공존의 조건.” 동경대 한국학연구소 세미나 2018/7/5.
- 천관율. 2018.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다.” 시사인 2018/5/28.
- 허지영. 2021 “고질갈등 이론으로 보는 남북관계.” 서보혁 문인철(편) 12개 렌즈로 보는 남북관계. 서울: 박영사.
- Bar-Tal, Daniel. 2013. Intractable Conflicts: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and Dynam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udling, Kenneth E. 1978. Stable Peac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8.
- Chhabra Meenakshi. 2016.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on Teaching a Historical Event of Collective Violence: The Case of the 1947 British India Partition.” In Bentravato D., Korostelina K.V. & Schulze M. (eds.) History Can Bite: History Education in Divided and Postwar Societies, V&R Unipress.
- Heo, Ji Young. 2020. Contentious Narratives on National Identity of South Korea: How to Understand the Self and the Significant Others,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erlin: Freie University Berlin.
- Kupchan, Charles A. 2010. How Enemies Become Friends: The Sources of Stable Peace. Princeton &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ouffe, Chantal. 2000. The Democratic Paradox. London: Verso.
- Mouffe, Chantal. 2005. On the Political. London: Routledge.

안정적 평화와 민주주의

: 다른 평화들의 소통과 경합

발행일 2022년 4월 2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